김현정 구성원변호사

BARUN LAW
법무법인(유한) 바른



TEL.
02-3479-4150

MAIL.
hyeonjung.kim@barunlaw.com

구성원 소개

김현정 변호사는 2001년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송무 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쌓은 송무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3년 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하였습니다.

김현정 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분쟁, 양육비, 성년후견 등 가사사건과 유류분 반환, 상속회복청구, 가업승계 등 가사상속분야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을 포함해 22년간의 법관 생활 동안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다단한 가사사건의 민·형사 이슈까지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 탁월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판사 재직 시 △ A기업 대표이사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청구에 관한 심판, △ 다수의 유류분반환, 상속회복청구 사건에 관한 재판, △ B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 및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C주식회사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분쟁 등 기업 관련 소송에 관한 재판,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인용 등의 주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학력

1988	광주여자고등학교 졸업
199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8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5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상법 전공)
2012	미국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2022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GLP 수료
2023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최고산업전략과정(AIP) 수료

경력

2001 ~ 2003	청주지방법원 예비판사
2003 ~ 2004	청주지방법원 판사
2004 ~ 200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2007 ~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 ~ 2011	서울가정법원 판사
2011 ~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최근업무사례

성범죄가 문제된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 감호위탁 등 경한 처분을 받은 사례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변호해 소년부 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상당한 규모의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형사]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동종 범죄에 관해 실형을 피하고 재차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이혼/상속 소송]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사건을 항소심 단계에서 대리하여 축출이혼임을 강조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높인 사건

[가사]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 단계에서 대리하여 쌍방 책임에 의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1심결과를 변경한 사건

주요업무분야

이혼/상속 소송

개인자산관리 및 승계

신탁

기업승계

기업금융

건설·부동산

행정소송

2014 ~ 201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6 ~ 2018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 ~ 2018	광주광역시 동구 선거관리위원장
2018 ~ 2021	수원지방법원 ·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민사합의, 영장)
2018 ~ 2020	의왕시 선거관리위원장
2021 ~ 2023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사합의)
2024 ~ 202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비상임감사
2024 ~ 현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26 ~ 현재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2023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주요 업무 및 활동

가사

- 이혼, 재산분할 사건
- 상속재산분할 사건
- 성년후견 사건

민사

- 유류분반환 사건
- 기업금융, 금융거래 사건
- 상속회복청구 사건
- 건설, 부동산 관련 분쟁 사건

영장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살인, 강도상해 등 강력사건
- 보이스피싱, 뇌물, 횡령, 사기, 배임사건 등

행정

-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 내지 무효확인 사건 등